

#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 법제개선 연구

주요 선진국들이 주력하고 있는 금융안정 기능과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발전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Fintech 규제·감독 체계의 타당성 부여를 위한 법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산업·경제·금융법제연구실 연구위원)

## I. 추진 배경 및 연구의 목적

FSB<sup>1</sup> 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는 2017년의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보고서를 통하여 금융안정에 핀테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소개하고, 각국의 규제 당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 등에 대하여 강조한 바 있다. 2018년 2월에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sup>2</sup>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에서도 「Implications of fintech developments for banks and bank supervisors」라는 금융안정 관련 은행 분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sup>1</sup>

이러한 국내외의 변화에 맞추어 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도 ‘금융안정 현안 분석’의 한 부분으로 “국내 현황 및 금융안정 리스크 평가”를 포함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핀테크 유형별 서비스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은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다른 보고서들과 마찬가지로 잠재리스크 증가 가능성이나 사이버 리스크 내지 제3기관 리스크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Reg-Tech 도입이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부분이 될 것임과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입법화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존에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판단된다.<sup>2</sup>

FSB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금융안정에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금융정책이나 금융감독에서 벗어나 국제적 협력이나 당국의 관심이 필요함을 인지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Fintech의 발전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을 파악하고 인지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Fintech 시장의 금융안정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안정과 규제적정성간 균형감을 고려하여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금융소비자의 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의 신뢰가 낮은 금융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규제 체계 및 감독 방식을 개선하게 되면, 해당 분야의 금융안정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의 신뢰는 관련 지표 등을 해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1. FSB,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from FinTech - Supervisory and Regulatory Issues that Merit Authorities' Attention」, 2017. 6. 27., pp. 1~59(www.fsb.org).

2. 한국은행[홍 - 금융안정 - 금융안정보고서(2018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 2018. 6.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93/view.do?nttId=10045275&menuNo=200769> 2018. 10. 22. 최종 검색)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신뢰를 ‘금융안정’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으나, 금융분야 규제환류체계 확립과 금융 관련 입법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절차적 참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소비자 지위 강화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 II. 주요 연구 내용과 기대효과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금융규제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기술혁신에 따른 산업의 특성상 금융안정성은 서비스·상품 제공자로서의 업체와 이용자(금융소비자) 간 편리성·접근성·보안성·혁신성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유리한 총체적·종합적 방안을 함께 모색한 바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안정 법제 개선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에 따른 Fintech의 금융안정에 대한 영향과 장기적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기초로 시장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의 지위 제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i) 금융규제 체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사전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론적 검토, ii) 금융감독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역할 규명과 Fintech시장의 장기적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적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방안 제시, iii) 시장 신뢰성 제고 방안으로서의 규제환류체계 확립과 Fintech 관련 규제 설계 과정에 금융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iv) Fintech 유형별 금융안정 관련 법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분야 규제 원칙의 변경가능성에 대하여 제시하고, 현행 우리나라의 금융 규제 체계에 적합한 네거티브 방식 규제의 범위와 규제체계 변경 방식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또한, 금융안정 평가에 대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금융소비자의 시장 신뢰 향상을 위한 적극적 입법 과정에의 금융소비자 참가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방안도 제안하였다. 나아가, Fintech 유형별로 나타날 수 있는 각각의 법적 문제점에 대하여 장기적 시각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금융안정 관련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 출현에 따른 금융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규제적정성에 기반한 금융안정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이 주력하고 있는 금융안정 기능과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금융발전과의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Fintech 규제·감독 체계의 타당성 부여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본 보고서의 제도 개선 방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안정과 금융업의 혁신적 발전이 모두 확보될 수 있는 조화로운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기술혁신에 따른 금융안정 법제 개선 연구>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